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대내경제 85

<주민생활>

생산의 국산화 강조
전력난으로 주민생활 영향

<농업 및 식량>

과도한 균량미 수탈과 식량 상황 악화

<에너지>

LPG품귀현상과 전력난 심화
전기요금 대폭 상향하고 누진세 적용

<보건>

北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

대외경제 87

<대북제재>

미국, 북한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유럽연합, 대북 사치품 금수 강화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수 늘어나

<북러관계>

나진-하산 간 북·러 국경철도를 통한 교역량 급증

부문별 주요 기사

11월 1일~11월 30일

대외경제 87

<북중관계>

북중교역 둔화 감지, 양국 간 무역액 8개월 연속 감소

北, 中 정부의 라오닝·지린성 대상 北관광 허용 조치로 '관광봉쇄'에서 벗어나

中, 단둥-신의주 '조중우의교' 일시 폐쇄 12월 중순으로 연기

<대북지원>

영국, 호주정부 대북지원 중단

대내경제

<주민생활>

조선일보(11.7), 아시아경제(11.15), RFA(11.16), 동아일보(11.21)

생산의 국산화 강조

지난달 4일 이후 11월 15일 금성트랙터 공장을 방문한 후 6일만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덕천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함. 새로개발한 ‘천리마-804호’를 보며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찬하며, 부품의 국산화 비중이 98.7% 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함. 이어서 자동차공장에서는 새로만든 신형 5톤급 트럭을 훌륭하다고 평가했으며, 국력이 강해지려면 자체생산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함.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시찰행보를 계속한 기간이 중국 쑹타오 특사가 방북한 기간과 겹쳐 의도적으로 공장시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보도임.

전력난으로 주민생활 영향

최근 북한 당국의 지시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1kWh 당 전기요금이 0.12원에서 3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초과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또한 각 세대에 전력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이는 전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함. 전기료의 변화는 평양에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은 아직 적용되지 않음. 지방은 평양보다 전력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보도됨.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가 부족하여 협동농장에서 기계로 도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농업 및 식량>

RFA(11.8, 11.10)

과도한 균량미 수탈과 남새농사 흉년으로 식량 상황 악화

올 한해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 이른 서리 등의 기상 악조건으로 농사작황이 평년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당국은 큰 자연재해 없이 비교적 농사가 잘 되었던 평년 생산량 기준으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정하고, 수확량의 대부분을 균량미로 거두어 가 농민들의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짐. 올해 남새농사 역시 중국산 비료와 농약 수입이 전면 차단됨에 따라 예년에 없는 흉작이 들어 김장철 배추와 무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 도당 지시로 남새 농사가 비교적 잘된 포전은 군부대에 김장필지로 분배되어 일반 주민들의 남새부족은 더욱 심화됨.

<에너지>

RFA(11.1, 11.7, 11.16, 11.20), VOA(11.24)

LPG 품귀현상과 전력난 심화

최근 북한 내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긴 줄이 생기는 등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7월을 전후해 대부분의 북한 유조선들이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올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중국을 왕복하며, 원유나 정제유를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던 유조선들의 운항이 크게 줄어든 것과 최근 휘발유 부족 사태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유가 뿐 아니라 가정용 액화가스(LPG) 충전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난방과 취사를 LPG에 의존하고 있는 평양시 고위 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해짐. 김정은 집권 후 건설된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의 아파트들은 애초 굴뚝이 없이 설계되었고,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취약한 화력발전 대신 액화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보다 액화가스 가격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농촌에서는 전기 공급이 부족해 협동농장들은 탈곡을 하지 못하고, 군인들의 식량도 도정을 하지 않은 겉곡을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고 전해짐. 해산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협동농장에 나와 두 달분의 감자를 실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 배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11월 16일 평안도와 양강도에서 조사한 시장 물가에 따르면 상승세를 보이던 휘발유와 디젤유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전기요금 대폭 상향하고 누진세 적용

북한당국이 세대별로 적산전력계(전력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 요금을 현 수준의 300~3,000배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가구별로 전기 제품 수에 따른 전력사용량을 어림잡아 주먹구구식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용량을 산출하고, 누진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임.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전력을 낭비하

던 북한 주민들도 요금이 크게 오르자 전기 절약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전기요금 부과방식 개선은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도 몇 차례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 당국도 현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적산전력계를 보급하는 것마저 버거울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임.

<보건>

RFA(11.7), 조선일보(11.24)

北,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7 결핵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동안 북한 내 결핵환자 수는 2015년보다 2만 명 증가한 13만 명, 사망자 수는 5천 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만 1천명으로 보고됨. 동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결핵 발생 건수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WHO는 북한을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시킴. 국제기구와 비영리 구호단체가 지속적으로 약품과 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환자 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만성 간염이나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B형 간염 감염자가 인구의 6~11%로 추정된다는 보도임.

대외경제

<대북제재>

VOA(11.7, 11.16), VOA, 매일경제(11.18), RFA(11.20), VOA, 조선일보, 연합뉴스, (11.21), VOA(11.22), RFA(11.27)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북한이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시기에 영변 핵실험 냉각탑 폭파 조건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9년만에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 이번 조치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재량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정·삭제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가 있음.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정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군수품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 할 수 있게 됨.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질 것을 시사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폭이 더욱 좁아지는 상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거론됨. 반면에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됨.

유럽연합, 대북 사치품 금수 강화

유럽연합(EU)이 주류, 의류, 식재료 등 22개 항목에 대한 대북 사치품 금수 목록을 발표하는 등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함. 구체적인 내용으로 과거 고급 와인, 스파클링 와인에 국한 되었던 금수 조치가 일반 주류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 또한 의류(75유로 이상), 장신구와 신발(20유로 이상), 가방 등 가죽제품 (50유로 이상), 버스·비행기·오토바이(1만유로 이상) 등 품목에 따라 수출 금액 상한액이 지정됨.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수 늘어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임. 최근 미국은 11월 17일(워싱턴 현지시간) 아프리카연합(AU) 소속 30여개국 외교장관 회동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격하와 북한 노동자 추방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수단, 북한과의 모든 교역 및 군사관계 단절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대신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시켜줄 것으로 시사했다는 보도임.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앙골라(북한 노동자 출국 명령,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지), 남아프리카 공화국(무기 수입, 군사협력 중지), 우간다(군사협력 관계 중지), 나미비아(북한과의 합작 프로젝트인 탄약공장건설건 중단) 등이 북한과의 외교·무역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밝혀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비자면제국 지위 취소),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방글라데시(북한 외교관 추방 또는 축소), 이집트, 베트남, 미얀마(불법적인 무기거래에 관련된 북한관리들 추방), 캄보디아, 몽골(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허가 전면 취소), 파키스탄, 태국(북한 고려항공 취항 금지) 등이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임.

〈북중관계〉

서울신문(11.9, 11.25), VOA(11.24,11.30), 세계일보(11.24), 연합뉴스(11.24,11.28)

북중교역 둔화 감지, 양국 간 무역액 8개월 연속 감소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10월 북중 무역액은 3억 3490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북한의 전체 곡물 수입량도 총 1만 3천 267t으로 전달에 비해 24% 감소하였음. 곡물별로 살펴보면, 옥수수의 수입량은 '0'으로 전혀 없었으며 쌀의 수입량은 1천 58t으로 전달 대비 56%감소하였음. 반면 밀가루는 올해 초부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달의 수입량은 1만 1천 6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이 줄고 비교적 값이 싼 밀가루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음.

최근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 역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아태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항만국통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11월 동안 북한 유조선은 단 한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북한이 올 중반까지만해도 중국 대련 등 많게는 일주일에 1회, 적게는 한 달에 1회씩 왕복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임. 이러한 북한 유조선의 움직임 둔화가 지난 10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한 제재 조치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北, 中 정부의 라오닝·지린성 대상 北관광 허용 조치로 '관광봉쇄'에서 벗어나

중국 당국이 라오닝·지린성 소재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다는 보도임. 중국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신의주 당일 관광만 허용하고, 그 이외 평양이나 북한 다른 지역으로의 관광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 까지 금지조치를 내렸었음. 북한의 관광사업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시행이후 수산물·섬유·천연자원 수출 등 외화벌이 수단이 막힌 상태에서 북한의 요긴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관광 금지 조치가 영향력있는 대북제재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 그러나 중국당국의 北관광에 대한 재허용 조치를 시행으로써 북한이 '관광 봉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 소식통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압박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북한과 교류를 위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접경지역에 한해 관광을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中, 단둥-신의주 '조중우의교' 일시 폐쇄 12월 중순으로 연기

중국과 북한 사이 주요한 무역 통로인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신의주 사이 철교('조중우의교')가 일시 폐쇄가 12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는 보도임. 당초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11월에 철교를 폐쇄 한다는 보도와 함께 이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음. 그러나 중국 당국이 11월 철교 폐쇄 계획을 철회하였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북중 양측이 합의해 중국이 철교 폐쇄를 연기했다는 정도만 확인되었음. 대북 소식통은 철교 폐쇄가 12월로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 중국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지 못하고 돌아온 직후 북중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중에 철교가 폐쇄된다면 북중관계가 악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해석을 의식하고 철교 폐쇄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음.

단둥은 북중 무역의 70%를 점하고 있고, 이 철교를 왕복하는 화물 트럭에 의해 농업용기계, 식량 등이 운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교 폐쇄는 사실상 무역제한조치라는 반응임. 그러나 10월초에도 화물을 적재한 중국 트럭이 조중우의교를 거쳐 북한을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단둥을 거치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도 중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중국의 철교 폐쇄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미국에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대북지원>

VOA(11.24), 중앙일보(11.25), VOA,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11.28)

영국, 호주정부 대북지원 중단

영국과 호주정부가 각각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는 보도임. 영국 외무부가 발표한 2016년 4월~2017년 3월 공적개발원조(ODA)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북한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및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미화 32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 개발에 대응해 영국정부는 대북 공적개발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2002년부터 양자간 대북원조를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다자간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해왔으나,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미화 220만 달러)을 끝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따라서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작년 총 7개국(캐나다, 중국, 인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에서 4개국(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11.22)

아래 표는 11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WFP	2017년 10월	지원품	2,631톤 식량, 영양강화 식품	북한 취약계층 82만 7천여 명에게 2,631톤 식량 지원, 9개도 60개 시 군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식품 지원
WFP	2017년 9월	지원품	2,176톤 식량	북한 취약계층 75만여 명에게 2,176톤 식량 지원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11.01] “북 LPG가격 폭등에 간부층 동요” (RFA)
- [2017.11.07] 북, 전기요금 300~3,000배 인상…주민 쥐어짜기? (RFA)
- [2017.11.07]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미국의 대북 압박 동참할 것” (VOA)
- [2017.11.07] 北, 전력난에 전기료 300~3000배 올려…전력계량기 설치도 의무화 (조선일보)
- [2017.11.07] WHO “북한 결핵 사망자 한 해 동안 두 배로” (RFA)
- [2017.11.08] 북, 과도한 균량미 수탈로 농민 위협 (RFA)
- [2017.11.09] 中, 장거리 北여행 전면 금지령 (서울신문)
- [2017.11.10] 북 주민, 채소값 비싸 김장도 못 해 (RFA)
- [2017.11.15] 김정은, 北트랙터 공장 시찰…11일만에 다시 경제행보 (아시아경제)
- [2017.11.16] “북, 전력난으로 도정하지 않은 걸곡 군에 공급”(RFA)
- [2017.11.16] 유엔 “24개 나라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미국·프랑스 추가” (VOA)
- [2017.11.18] EU, 北에 시계·와인 수출 전면금지…사치품 금수 강화 (매일경제)
- [2017.11.18] 킬러슨, 아프리카 국가들에 “북한과 외교 격하, 경제 단절” 촉구 (VOA)
- [2017.11.18] 킬러슨 “아프리카, 북한과 관계 격하하고 北노동자 추방해달라” (연합뉴스)
- [2017.11.20] 미 재무부, 북 테러지원국 지정 후속 조치 착수…21일 추가 제재 (RFA)
- [2017.11.20] 북 기름값 상승세 주춤, 큰 폭으로 떨어져 (RFA)
- [2017.11.21] 北김정은, 트랙터이어 자동차공장 시찰…“적 발악할수록 더 강해져” (동아일보)
- [2017.11.21] “북한은 살인정권”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조선일보)
- [2017.11.21] 트럼프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최고 수위 제재 나올 것” (VOA)
- [2017.11.21]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최대의 압박 일환” (연합뉴스)
- [2017.11.22] WFP 10월 대북 식량지원 올들어 최대 (VOA)
- [2017.11.22] 미 전문가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엇갈린 반응 (VOA)
- [2017.11.24] 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 (VOA)
- [2017.11.24] 中, 지난달 대북수입액 급감 (세계일보)
- [2017.11.24] 북한 유조선, 7월 전후 일제히 운항 중단…“원유 공급에 차질” (VOA)
- [2017.11.24] “중정부 단둥-신의주 철교 열흘간 일시 폐쇄”…北압력 의도? (연합뉴스)
- [2017.11.24] “北中 신의주-단둥 철교 임시 폐쇄 12월 중순으로 연기” (연합뉴스)
- [2017.11.24] 북한 유조선 7월 전후 일제히 운항 중단 “원유 공급에 차질” (VOA)
- [2017.11.24] 북한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조선일보)
- [2017.11.25] 中, 단둥~신의주 철교 새달 중순 임시 폐쇄…北압박? (서울신문)

- [2017.11.25] 영국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 중단. 고려항공도 타지 말라” (중앙일보)
- [2017.11.27] 아프리카서 갈 곳 잃은 북…시리아 진출 기대 (RFA)
- [2017.11.28] 인도지원도 끊겨가는 북한… 호주 “분배 감시 어렵다” (한국일보)
- [2017.11.28] "호주, 대북 인도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렵다' 이유" (연합뉴스)
- [2017.11.28] 호주, 대북 인도 지원 중단…“분배 감시 접근 어려워” (동아일보)
- [2017.11.28] 호주 외교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려워” (VOA)
- [2017.11.28] 中, 라오닝·지린성 대상 北관광 허용조치로 ‘숨통 트’ 북한 (연합뉴스)
- [2017.11.30] 북한 10월 중국산 곡물 수입 크게 감소…쌀 수입 절반 감소, 옥수수 수입↑ (VOA)